



양계 안 테 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육계 계열화사업 방향 연구 중간보고 깊이 있는 연구와 냉철한 평가가 요구된다

육계계열화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뜨겁게 일고 있다. 계열화 사업에 대한 논란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계열화 비율이 높아지고 계열주체와 농가들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이 같은 논의는 금년 초 축산법 개정논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던 ‘가축계열화 사업’을 추가시키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가축계열화 사업’은 1999년 축산법에서 삭제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바 있다.

본회를 비롯한 양계인들은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 등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계열화 사업에 대한 축산법 삽입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통해 계열화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에 이르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11월에 계열화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연구사업은 계열화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검토된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법률적 근거 미흡,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간의 갈등, 도계육 판매의 구조적 가격결정체계, 원자재(병아리, 사료) 품질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부회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중간평가 보고에서 나온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에도 가축계열화 용어에 대한 내용과 유통명령(유통협약) 등에 대한 신설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계사 현대화 시설 방안, 양계관련 기본 통계조사, 계육협동조합 설립, 표준계약서, 중재위원회 설치, 농가협의회 활성화 등이 기본 연구 계획으로 채택되어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계농가 입장에서는 표준계약서와 중재위원회, 농가협의회 활성화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계열업체들의 입장과 양계인들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가축계열화에 대한 법률적 내용이 계열사들의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양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계 DB사업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을 강조하면서 기초 통계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정부지원만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국내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유럽 등 양계선진국들의 사례를 인용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해답인양 접근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150개 농가를 대상으로 협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계열화사업의 현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 계약서에 대한 평가는 93%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으며, 연료비 등 경비 지급 역시 93% 농가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주었다. 또한 농가 협의체 구성에는 89%가 찬성하였고, 병아리 품질은 57%가 불만족이며, 사료는 40%가 불만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겨우 7%에 못 미쳤고 불만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답변으로 볼때 많은 농가들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사되는 육계계열화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닭경제능력 검정사업의 의미 40여년간의 검정 역사 이어갈 중요한 사업

종축개량 및 검정업무는 세대가 바뀌어도 인류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근년들면서 검정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애써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으며, 정부에서 조차 검정사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는 지난 1966년 4월 1일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산란계검정(예비검정은 1965년)을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육계검정도 이루어지면서 매년 산란계는 1회, 육계는 2~3회를 주기적으로 검정하기에 이르렀다. 1984년 11월에 현재의 안성으로 검정소를 이전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검정이 이루어졌고, 농가의 무창, 자동화에 따른 변화로 산란계의 경우 무창계사와 개방계사에서 같은 계종을 비교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산란계는 41회, 육계는 83회의 검정이 이루어지면서 검정에 따른 방대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정사업은 검정 자체 뿐만아니라 검정을 통한 자료적 보존가치만 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한국가금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는 ‘능력검정 자료를 이용한 국내 산란계의 생산성 변화 추이와 개량 진도 추정’이라는 제목의 내용의 연구자료가 신구대학교 최연호 교수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7년까지 40년에 걸쳐 검정된 218,268수에 대한 성적을 회귀분석을 통해 10년단위로 4그룹을 나누었고 난각색에 따라 백색종과 갈색종으로 나누어 비교를 한 자료이다. 분석결과 40년 동안 산란지수는 126개의 계란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난중이 5.5g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율은 13% 증가, 초산일령은 31일 감소, 산란율은 26%

증가 등 이 밖에 다양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종계와 원종계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검정사업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계종이 들어오더라도 국내에서의 사육환경은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검정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위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내 양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향후 육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본회에서는 안성검정소의 시설과 열악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현 부지에서는 검정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수년 전부터 검정소 이전을 검토해 오고 있다. 닦경제능력검정소도 검정연구소로 바꾸고 이에 맞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검정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도 검정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검정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계자조금 사업 정착의 길 농가들의 참여여부가 성공의 지름길

산란계, 육계 자조금이 발족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산란계는 금년까지 7억원(정부보조 3억5천), 육계는 2억5천만원(정부보조 1억2천5백만원)의 사업승인이 떨어지면서 각종 홍보사업, 간행물 사업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는 한우(220억원), 낙농(90억원), 양돈(160억원)과 견주어 볼 때 자조금 조성금액에서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 볼 수 있으나 시작 한지 반년만에 이룬 성과라고 보면 향후 홍보확대와 참여율이 높아질 경우 정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육계자조금은 자조금 시행 외중에 1기 대의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지난 24일부터 나흘간 지역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2기 대의원이 구성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대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며, 수당 5원씩 거출하고 있는 자조금에 의한 효과가 50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산란계 자조금 역시 농가들의 참여와 노계처리장들의 협조하에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 블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구체적인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사업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아 자조금에 협조하는 농가들이 공허감에 빠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으나 사무국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자조금법이 입법 예고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강화, 대의원 선거(무투표 당선) 내용 등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 내는 것인 만큼 자율적인 거출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양계**